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지역경제연구실 /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진 연구위원
최태림 연구위원
조승헌 연구위원

교통물류연구실 / 강동준 연구위원
도시기반연구실 / 기윤환 연구위원
안내영 연구위원
조성윤 부연구위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배경과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3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특히,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 그러나 인천시 디지털산업 기반과 주력제조업 현황을 고려하면, 디지털산업 육성만으로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한계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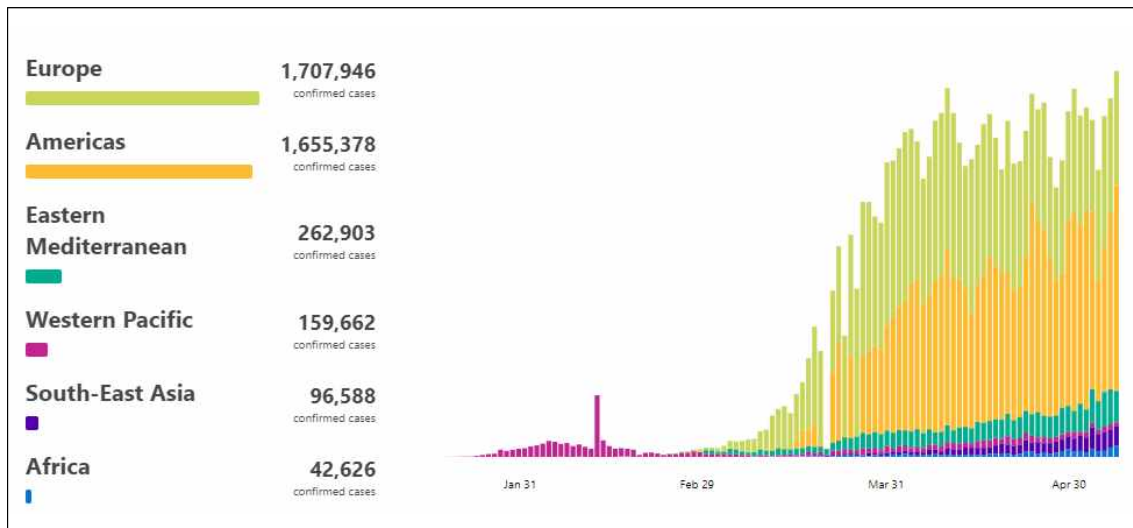
- 인천시는 정부 디지털 뉴딜에 대응한 디지털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과 함께 그동안 미루어온 혁신 인프라 및 포용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현안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현시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가 산업구조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인천형 뉴딜에 대해 3대 분야에 25개 사업과제 선정 및 제안

1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의 특성

◆ 감염병 대유행의 외부충격 발생 및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 흐름 중단

-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위적인 인적·물적 이동 제한 조치 시행
 - 2020년 5월 10일 오전 9시(GMT+9) 기준으로 215개 국가에서 3,925,8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74,488명이 사망하는 전례 없는 전세계적 대유행이 발생(WHO)
 -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포함한 인위적 인적·물적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 위기 및 매출 하락 확대
- 경제 규모가 크고 소비시장의 중요성이 높은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정부의 강력한 인적·물적 이동 제한 조치인 Shut-Down이 시행되면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둔화되기 시작한 경제 흐름이 국가 개입으로 중단
 -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인천을 포함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그림 1] 세계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료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현황판(www.covid19.who.int), 2020년 5월 10일 기준

- 인천은 세계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하여 항공, 항만, 관광 등의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또한 조달공급망의 교란 및 해외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

◆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소비와 공급 모두에서 발생**

- **국내의 소득 감소 및 해외의 봉쇄조치로 인하여 소비량 감소**
 - 국내에서는 소비가 감소한 대면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소비량이 감소
 - 국외에서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Shut-Down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비량의 절대적인 위축이 발생
- **중국 등의 산업활동 위축으로 조달공급망의 교란이 발생하여 공급량 감소**
 - 低임금·低비용의 이점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이 신형국의 방역 불투명성과 취약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화
 -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한 부품·소재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제조업에서 공급량 감소 발생
- **소비량과 공급량의 동시 감소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가시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동시에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경제 전체의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해석됨
 - 현재 수요 부문의 위축이 공급 부문의 위축보다 크기 때문에 低유가·低금리·低물가가 외부충격의 결과이자 공황의 징후로 발생

◆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국면으로서 The Great Lockdown 발생 예측**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으로 전이되기 시작**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순환 중단의 형태였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의 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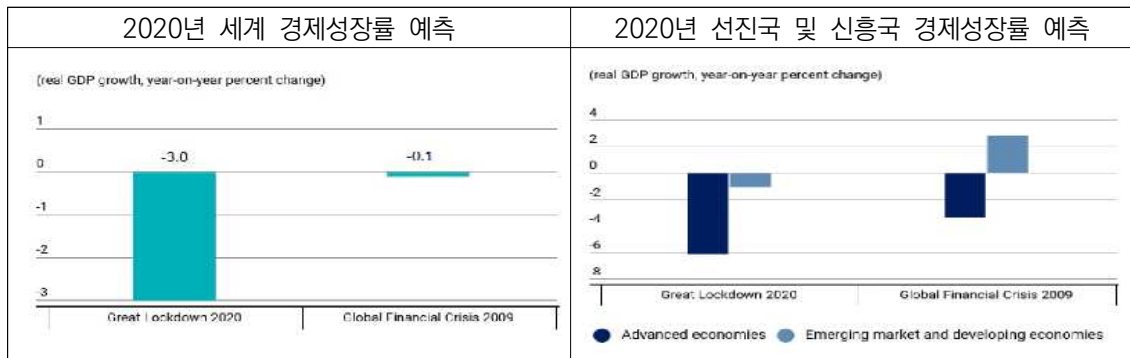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충격의 경제적 전이 경로



자료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0. 4)

- IMF는 2020년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
 - IMF는 세계 경제가 소위 The Great Lockdown을 경험하면서 -3% 성장할 것이며, 특히 선진국들은 2020년 동안 -6.1%로 2009년 글로벌경제위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

[그림 3]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04.15

2 중앙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및 한국판 뉴딜 정책

● 고용 위기 대응: 단기적 소득보전에서 장기적 고용안전망 개선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3~5월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하여 소득보전책 실행
 -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료 감면, 가족돌봄비용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5월 1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표 1] 중앙정부의 고용안정 대책 추진계획

구 분	주요 대책	지원시기 ('20)		
		2/4	3/4	4/4
재직자· 고용유지 생계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351→5,004억원) * 지원수준 상향: 휴업(휴직)수당의 2/3→9/10(대기업 /3→2/3~3/4)	4~6월		
	◦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21,647→26,611억원) * (5인미만) 11→18만원, (5~9인)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3~6월분 (4개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6개월		
	◦ 무급휴직자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934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약12만명, 2개월간 100만원)	4~5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885→1,103억원) *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비정규직·특고는 소득요건 미적용	3~7월		
실업자 재취업 생계안정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14→19만명, +5만명) 및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재도입(5.8만명, 289억원)	계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37.4→43.6만명, +4만명)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확대(327→428억원)	계속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계속		
취약계층 생계안정	◦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1,073억원)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약 14만명, 2개월간 100만원)	4~5월		
	◦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계속		
	◦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1,000억원)	4~8월		
저소득층 소득보전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하위 70%, 7.6조원)	일회성		
	◦ 기초생보·차상위 대상 소비쿠폰(169만가구, 1조원)	일회성		
	◦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특별돌봄쿠폰(265만명, 1.1조원)	4개월분		
	◦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센티브(23.6만원, 54.3만명 1,281억원)	4개월분		
	◦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1,656→3,656억원)	~7월까지 신청		
	◦ 가족돌봄비용(10일) 긴급 지원(12만가구, 529억원)	코로나 종료시		

자료 :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04.22.

-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특별연설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의지를 천명
 -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존 고용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포괄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 마련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의 도입으로 구직수당,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
- 즉, 중앙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 위기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 및 소득보전책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구조 고도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디지털 경제화 추진**

-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정책 입안
 - 중앙정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모든 일상 활동에서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은 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 ② 민간투자 확대로 시너지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과제 선정, ③ 경제 전반으로의 혁신 확산 효과, ④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선정 등의 4대 원칙을 지향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표 2]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개요

구분	세부 분야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① 데이터 소유권 인프라 강화 ② 국민체감 핵심 6개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③ 5G 인프라 조기 구축 ④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⑤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⑥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산업 육성	-	⑦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⑧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SOC 디지털화	-	⑨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⑩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020.05.07.

-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살펴볼 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인 디지털 경제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충분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경기부양의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고도화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두고 있음

◆ **코로나 이후 산업전략: 산업·기업 활동 여건 및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적응**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코로나 이후 산업 여건의 변화 예측 및 대응 논의가 이루어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회의’를 통하여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전략을 논의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20.05.06.)
-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한국 바이오·방역 산업의 해외 진출,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수립 추진
 -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설정

[표 3] 산업통상자원부의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구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대응과제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①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②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③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경제환경	대면	비대면	④ 비대면산업 육성 ※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헬스케어 등
	석유 수요 증가	석유 수요 감소	⑤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연료 등
기업경영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⑥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⑦ 기업간 연대 및 협력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패션 구축 ※ 업종간 신산업 공동 진출, 퇴직인력 교류 등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⑧ 글로벌 협력 리더십 ※ 기업인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추가 무역장벽 설정 중단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05.05.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제조업·물류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며, 글로벌가치사슬 편입 정도가 높은 인천의 향후 경제·산업 발전 방향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 인천지역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이 가시화되는 2/4분기부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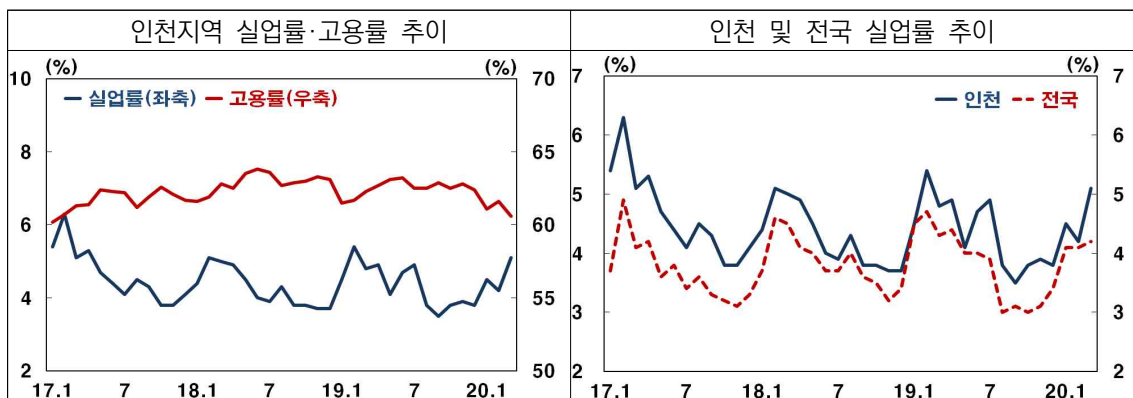
-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충격은 운송, 공항만, 관광 등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에서 먼저 발생
 - 2020년 4월 기준으로 항공 및 공항 관련 종사자 56,451명 중 48%에 달하는 27,301명이 휴직 및 퇴직 상태
 - 인천지역의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 중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한 154.1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2월 3.8%에서 발생 후인 2020년 3월 5.1%로 크게 증가(한국은행 인천본부, 2020.05.06.)
 - 인천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2020년 2월 중 전월 대비 12.7% 감소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2020년 2월 95.3에서 3월 80.4로 14.9p 하락.

[표 4] 인천공항 관련 산업 고용 현황 (2020.04.09.기준)

구분	인력규모(명)	유급휴직(명)	무급휴직(명)	희망퇴직(명)
항공사	25,013	3,884	8,842	-
면세·상업시설	11,850	1,774	1,499	784
지상조업	13,491	2,427	4,448	1,412
호텔·카지노	4,027	1,156	296	-
물류업	7,149	-	-	-
합계	61,530	9,241	15,085	2,197

자료 : 인천공항공사 조사, 인천광역시 항공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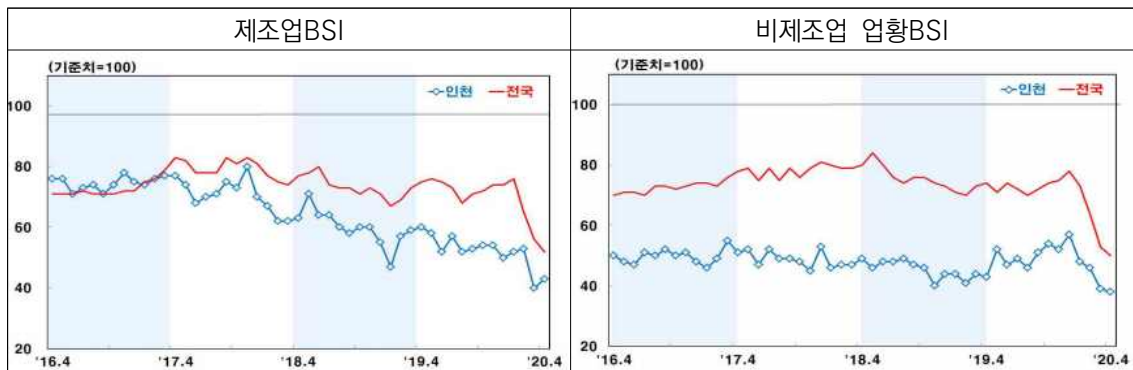
[그림 4] 인천지역 실업률·고용률 추이 및 전국 평균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0.05.06.

- 2020년 4월 이후에는 미국 및 유럽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조치(lock down)가 본격화되어 수출 감소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지역 제조업 위기 본격화
 - 인천지역 제조업의 업황BSI는 2019년 12월 50p에서 2020년 4월 43p로 하락하였음. 특히,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5월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KDI는 「경제동향 5월호」(2020.05.12.)를 통해 “4월 수출금액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24.3%”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주력품목 모두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함
 - 아직까지 지역 단위 4월 무역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수출실적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인천의 경우에도 큰 폭의 수출 하락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5] 인천지역 업황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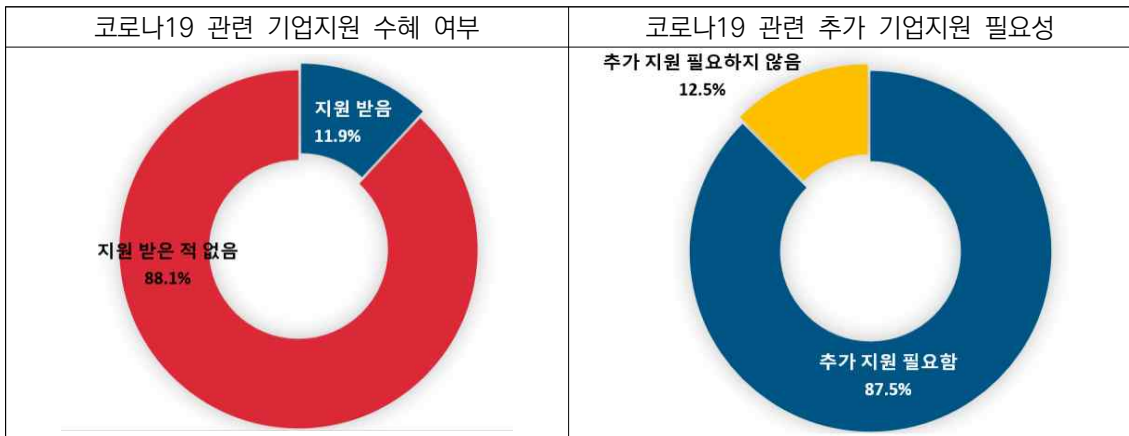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0.05.06.

◆ 인천지역의 경제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의 경기부양책 실행 필요

- 인천은 대외교역을 위한 제조업과 인적·물적 이동에 기반한 운송업 및 물류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봉쇄조치(lockdown)에 의한 경제적 충격이 타지역보다 심각함
 - 1/4분기 운송업·관광업의 침체에 이어 2/4분기 수출제조업의 침체가 결합되면서 인천경제에서는 타지역보다 먼저 실물부문 충격이 현실화
- 현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소득보전 및 기업의 경영유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인천시의 선별적·추가적 조치가 필요함
 - 2~3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자원투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제·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책의 후속조치로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경기부양 목적의 지원정책 수행 필요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경기침체의 초기 단계에 단발적으로 유효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경기침체기 동안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인 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어야 함
 - 인천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기업·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편적 지원이 우선 실행 중인 가운데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가 가중되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준비해야 함

[그림 6] 인천지역 기업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수혜 여부 및 추가 수요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코로나19 지원정책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2020.04.

◆ 경기침체기 이후 발전을 대비한 혁신자산 및 디지털경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경기침체기 이후 지역경제가 이전의 성장곡선으로 회귀하는 시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침체기 동안 지역혁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함
 - 경기침체기에 동반되는 구조조정은 부정적(negative) 경향성과 긍정적(positive) 경향성을 모두 수반할 수 있음
 - 부정적 경향성은 경제주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계에 직면한 기업·산업의 퇴출로 나타남. 반면 긍정적 경향성은 경제주체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성장경로를 창출하는 “path creation”의 형태로 나타나며,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성장경로 창출수단은 연구개발시설, 산업단지, 정보인프라와 같은 혁신자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산업인프라 및 연구개발과 데이터 등 혁신자산 기반확충의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함
 - 2000년대 초부터 구조화된 인천지역 내의 혁신자산 부족 문제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혁신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고착화를 유발
 - 다만,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건설·토목사업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산업구조고도화가 어느 한 방향의 투자로만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무조건적인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각종 혁신 인프라 조성 계획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어온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 인프라 건설사업이 경기부양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지원의 후속조치로서, 인천시는 기업 생존 및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구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혁신성장 인프라와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인천형 뉴딜을 구상하여 추진해야 함

4 인천형 뉴딜 추진방향

◆ 한국판 뉴딜의 한계와 인천형 뉴딜의 필요성

-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은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기 경제부흥을 위해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정책기조를 발표
 - 한국판 뉴딜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5G, 데이터, AI 등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기부양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읽힘
 -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수준이 세계 1, 2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디지털 경제로만 충족되기는 어려우며, 디지털화 여력이 열악한 영세중소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에서는 그 효과가 더 축소될 수 있음
 - 또한, 지역 내 디지털 산업기반이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극히 취약하다는 점도 한국판 뉴딜의 지역내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
 - ※ 국내 데이터산업의 기업체 60% 이상이 서울시에 집중해있으며,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약 77% 수준인 것에 비하면, 인천시는 약 2.1% 수준으로 매우 취약
- 인천형 뉴딜의 필요성과 목적
 - 인천은 전통적으로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2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혁신역량은 매우 취약
 - 따라서 뉴딜정책에 의한 투자가 코로나 이후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뿐 아니라,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혁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혁신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한편, 수출입 비중이 높은 인천의 제조업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 인천형 뉴딜 추진전략 및 정책모형 제안

- 추진전략1 :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 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물류-빅데이터, 로봇-인공지능, 바이오의약-빅데이터 등 지역의 주력분야와 연계한 국책 인프라 사업 및 연구기관 유치
 -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한 데이터산업 수요창출 사업
 -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송도, 청라 등 IT서비스 기업유치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암-마곡-계양-구로-강남을 잇는 광역클러스터로서 디지털밸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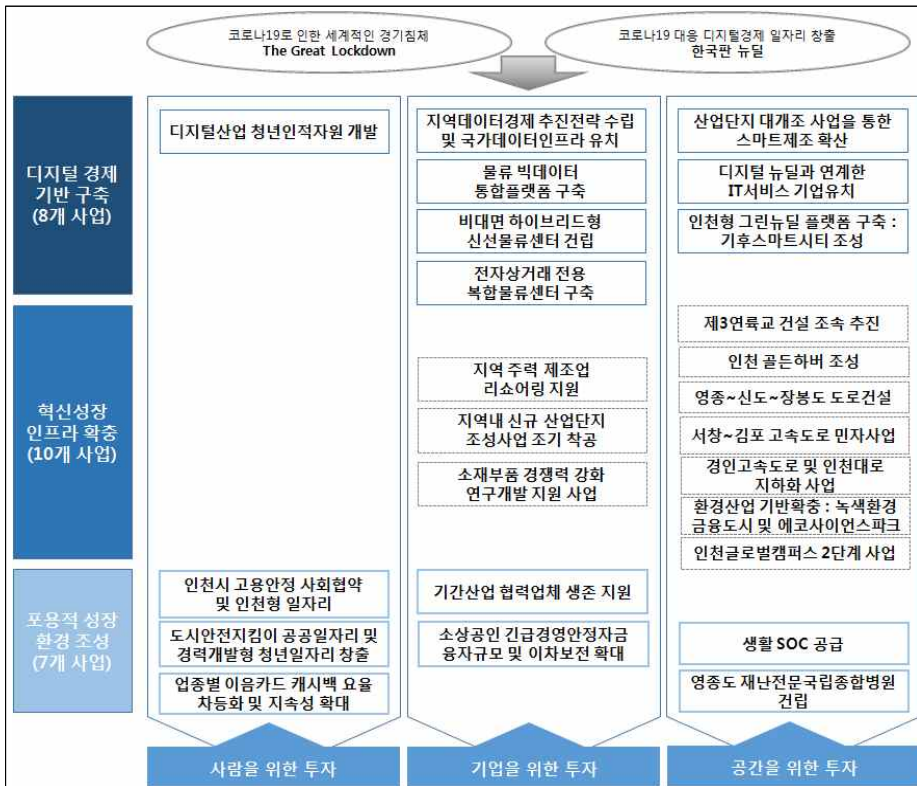
□ 추진전략2 :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 로봇랜드, 바이오융합기술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남촌일반 산업단지 등 그동안 지연되어온 산업 혁신 인프라의 조기 착공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단 대개조(스마트 산단) 사업, 장기적으로는 서북부 개별입지 공장 재정비 사업 등 적시 시행
-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주요 교통망 연계를 위한 SOC 사업 촉진
- 주력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역량 강화
- 첨단입지 공급을 통한 바이오 강소기업, 로봇 앵커기업 유치 강화 및 정부 제조업 리쇼어링과 연계한 소재부품 중견기업 유치 확대로 수직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병원-임상-의료기기, 소재부품-바이오/로봇/항공 등 연관업종, 물류로봇-헬스케어로봇 등 특화로봇 분야의 기업유치로 수평적 협업체계 확대

□ 추진전략3 : 포용적 성장 환경 조성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영세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한 기간산업 및 수출산업 협력업체 생존 지원
- 주민생활 및 중소기업 근로복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연계

[그림 7] 인천형 뉴딜 정책 모형



5 인천형 뉴딜 선도사업 제안

◆ 인천형 뉴딜 사업과제 목록

- 인천형 뉴딜의 3대 추진전략에 대해 25개 사업과제 제안
 - 지역 혁신역량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 기존 지연된 사업 또는 착수 예정인 사업 가운데 여건 조성에 따라 조기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 지방비 투입 최소화 및 단기적(2~3년내)으로 착수 가능성이 큰 사업 등 25개 대표사업 제안

[표 5] 인천형 뉴딜 사업과제(안)

구분	사업과제	관련내용(p)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8개 사업)	지역 데이터 경제 추진전략 수립 및 국가 데이터 인프라 유치	15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한 스마트제조 확산	17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IT서비스 기업유치	19
	물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21
	비대면 하이브리드형 신선물류센터 건립	23
	전자상거래 전용 복합물류센터 구축	24
	디지털 산업 청년인적자원 개발 사업	26
	인천형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 : 기후스마트시티 조성	27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 (10개 사업)	지역 주력제조업 리쇼어링 지원	29
	지역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착공	31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32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34
	영종~신도 평화도로 및 신도~장봉도 연결로 건설	36
	인천 골든하버 조성	39
	제3연륙교 건설 조속추진	41
	경인고속도로 및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43
	환경산업 기반확충 : 녹색환경금융도시와 에코사이언스파크	46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48
포용적 성장 환경 조성 (7개 사업)	고용안정 사회협약 및 인천형 일자리	50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이차보전 확대	52
	업종별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 차등화 및 지속성 확대	53
	기간산업수출산업 협력업체 생존 지원	54
	도시안전지킴이 공공일자리 및 경력개발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56
	생활 SOC 공급	58
	영종도 재난전문국립종합병원 건립 사업	64

01

지역 데이터 경제 추진전략 수립 및 국가 데이터 인프라 유치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으로서 '디지털 뉴딜'을 제시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를 제안
- 또한, 5월말까지 전산업·전분야에 걸친 대규모 디지털 기반 세부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구조고도화를 실현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되어야, 인천시의 대응전략 마련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10대 중점과제에 의하면, ① 데이터, 5G, AI분야의 인프라 사업, ② 비대면 서비스 및 클라우드 부문 산업육성, ③ 노후 국가기반시설 및 물류체계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서 세부사업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
- 인천은 지역의 강점인 데이터, 클라우드, 물류분야에서 인프라와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 유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2019년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신분야 빅데이터 센터를 이미 유치하였으며, 공항과 항만 입지를 기반으로 한 물류 빅데이터, 바이오의약 대기업 입지를 활용한 바이오의약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데이터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 클라우드는 빅데이터의 기반기술 가운데 하나이며, 경제자유구역내 하나금융 데이터센터, 교보데이터센터 등 이미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입지해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어서, 지역내 반드시 필요한 기반기술 분야
 - 반면, 물류분야는 대중국 수출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내 전통 주력산업으로서, 공항과 항만을 배경으로 빅데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서비스 수요가 존재
- 이러한 지역의 강점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경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
- 따라서, 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에 맞춰, 전 산업과 전 분야를 망라한 인천시 데이터 경제 추진전략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사업내용

- 지역 데이터 경제 추진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및 물류분야 서비스 구축 사업의 적극적 유치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데이터혁신담당관)

◆ 기대효과

-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력산업 생산성 향상 및 혁신역량 제고
-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조기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02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한 스마트제조 확산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서 '디지털 뉴딜'을 제시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를 제안
- 인천시는 2020년 5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시행자로 선정
- 인천시는 동 사업을 통해 남동산단을 거점산단으로, 주안부평 산단 및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연계산단(지역)으로 하여, ①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 ②미래지향 청년 일자리 마련, ③스마트시티형 미래 산업단지 구현 등 3대 목표하에, 다양한 스마트사업과 혁신과제를 통해 노후 산단을 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 산단 대개조 사업에서 스마트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동 사업은 스마트산단에 대한 국가적 또는 지역내 시범사업의 성격
 - 이를 통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산단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스마트 제조혁신의 시범도시로 브랜드화 필요
 - 인천은 2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과 기계금속 등 전통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후 산단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업무 자동화 측면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산자동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부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정부 지원사업(산단 대개조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형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개발
- 지역내 전 산업단지 및 전 산업으로 스마트제조 확산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산업진흥과)

◆ 기대효과

-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 만족도 제고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역량 제고

-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스마트기술 기반 대중소 기업간 협업체계 강화로 혁신역량 확충

03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IT서비스 기업유치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 등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 초기부터 IT산업을 주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해왔지만, IT제조업은 상당한 성과를 보인 반면, IT서비스업의 성장은 정체
- 최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설립, 통신부문 빅데이터 센터 유치 등 지역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데이터산업의 기업체 60% 이상이 서울시에 집중해있으며, 서울과 경기를 합쳐 약 77% 수준인 것에 비하면, 인천시는 약 2.1% 수준으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
- 이와 같은 입지 현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역 수혜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음.
- 인천이 모든 IT서비스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산업의 중요성 및 지역혁신 기반산업으로서 지역수요 대응 측면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산업기반 확보는 필요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송도, 청라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외부 이전기업에 대한 저렴한 입지공급 및 세제 혜택 확대 등 디지털 뉴딜 관련 IT서비스 업종의 기업입지 혜택을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집적지를 조성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할 필요
- 한편, 장기적으로 계양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산업과 클라우드, AR/VR 등 연관산업을 집적시키고, 상암의 디지털콘텐츠, 마곡의 IT R&D, 구로(금천)와 강남의 SI 및 벤처기업을 연계시켜,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지역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송도 스타트업 벤처폴리스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관련 IT서비스 기업입지 인센티브 및 대중소 기업유치 확대로 산업기반 확충

- 청라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IT서비스 기업입지 공급 및 집적지 조성
- 데이터산업 관련 각종 국책 인프라 및 연구시설 적극 유치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력양성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등 4차 산업혁명 선도클러스터로 육성

◆ 추진주체

- 주관·전담(중앙정부·인천시)

◆ 기대효과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첨단 IT서비스 기업유치를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 지역 혁신역량 제고
- 장기적으로는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및 연계 지역간 교통망 확충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서비스업 상생발전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기여

04

[Digital Infra] 물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실정을 반영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상정보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물류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필요
- 공항과 항만, 자유무역지역 및 생활물류 등 물류정보를 파악해 위기관리 능력 확보 및 관련 분야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기반 마련
 - 물류정보 통계는 주관기관별, 업무별로 생성되는 정보량, 조사방법, 수집주기 등이 모두 상이해 실시간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

* 부산항,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체인포털) 오픈('20.4.)

◆ 사업내용

- 인천 지역내 물류관련 Data조사 및 Database 구축 재개*
 - * 인천시는 2006~2008년 인천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예산지원 부족과 운영주체 문제, 인천시의 사업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사업 중단
- 물류에 관련된 통계 정보를 관련 기관(국가물류정보포털, 통계청, 관세청, 철도공사 및 IPA 등)에서 수집하여 DB를 시범 구축하고, 그 외에 동북아 10개 도시의 물류기점인 공항항만 현황 정보 수집, 그 외 수출입물류현황분석자료, 산업물류현황분석자료, 도시물류 현황분석자료를 구축
- 파일럿 시스템에서 기 구축된 DB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기개발된 단위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및 추가하며, 기업정보시스템을 추가적인 단위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인천시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 기대효과

- 인천시 물류업체의 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 향후 해외 주요도시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 교류 및 거래 확대로 아시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 기반 마련
- 화물 운송으로 인한 도심 내 정체, 환경오염, 보행자 안전 문제 등 부정적 요소 발생 저감

05

[비대면 산업육성] 비대면 하이브리드형 신선물류센터 건립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소비패턴(새벽 배송 및 가정 간편식 시장)의 변화로 신선(콜드체인)물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적정온도' 유지가 관건인 데이터센터와 운영 성격상의 공통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이종산업 간 결합 추진 가능성 대두
 - 데이터센터 : 통신 기기인 라우터와 수많은 서버, 그리고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한 UPS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집적 시설로 발열을 냉각하는 공조 설비체제
 - 신선물류센터 : 제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온도, 습도 및 멸균 유지 필요.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냉장 설비 필수
- 각기 다른 산업군에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이종산업 간의 결합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 및 효율성 도모

◆ 사업내용

- 신선물류 센터 일부 저온센터 부지에 데이터센터 구축
 - 인천항, 인천공항 등 인천관내 유치 가능성 검토
 - * 한국투자증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 중인 용인 모처 물류센터 개발사업은 물류센터 일부 저온센터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
- 기존 노후 신선물류센터 개선 혹은 항만배후단지 대상 데이터센터와의 결합 등 검토
 -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재활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고 예정(2020년 하반기)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민자)

◆ 기대효과

- 급증하는 신사업 수요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이종산업 간의 결합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언택트 기반산업 성장으로 인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복합물류센터 구축 필요성 급증
 -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35조 달러에서 2023년까지 6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국경간 전자상거래(CBEC, Cross Border E-Commerce)의 단위 물품 급증으로 운송비용 절감과 단순한 물류대행에서 정보기술(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물류업무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확산 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 필요성 대두
 - * 풀필먼트 서비스 : 글로벌 셀러가 고객의 주문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예. 아마존 등)
- 최근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발생시 대응 가능한 안전재고(Safety Cargo)의 필요성이 급증되고 있고, 주요 수요 및 공급처인 대중국 화물을 시공간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적모델 필요성이 지속적 제기
 -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해외 물류센터에서 현지 주문 및 배송방식으로 프로세스 변경시 자국내 소포장 분할후 배송방식보다 물류비 및 처리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며, 국내 물류업체 역시 전자상거래업체 물류를 대행함으로써 보관료, 작업비 등의 수익창출 가능
 - * 알리바바, 아마존, 아이허브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는 아시아시장 공략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최적의 거점국가와 물류파트너를 선정 중이며, 중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최적의 환적 요충지로 물망

◆ 사업내용

- 인천항 e-Commerce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 아암물류2단지 내 전자상거래 물류클러스터(12만3천㎡) 구축 예정
 - * 최근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개입찰에서 민간제안 공모로 전환할 계획
 - 국경간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환적모델 개발
 - * 전자상거래 통관환경 조성 및 우수한 물류인프라(항공-해상(Sea&Air)배송 채널)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시설과 소비자유통시설 동시 구축
 -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마스블락테, 싱가포르항 SingPort, 중국 상해 양산항 린강신도시, UAE 아부다비 칼리따항 산업단지 등
 -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항의 패러다임 변화, 전자상거래 기반 O2O 물류선테형 상업항 조성이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복합물류센터형 항만으로 개선 제안

□ 글로벌 셀러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투자유치

- GDC 설립 및 유치의 핵심 결정요인인 물류배송비 최소화를 위한 지리적 위치,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관·물류 환경, 충분한 항공·해상 배송 인프라의 장점을 부각한 투자유치 전략 및 지원책 마련

* CJ대한통운, 아이허브의 아시아권역 국제물류센터(ODC: Overseas Distribution Center) 유치(인천공항)

● 추진주체

□ 주관·전담 : 인천광역시·인천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관세청

● 기대효과

□ 글로벌 셀러 유치시 물류업체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공항만 터미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 발생

* 관세청, 5,000평 이상 글로벌 셀러 1개 유치시 약 1,000억원 경제효과 발생 예측

〈5,000평 규모 GDC 유치시 경제효과〉

구분	내용	경제효과(안)
유치 효과	GDC 물량(2만톤) 반입분류보관작업-통관-배송 수행	일자리 300~400명 부가가치 500억원
파급 효과	(해운) 미-중 셀러 물량(컨 1,000TEU) 한국 운송 * 해상운임: 1TEU당 미화 3,000불	33억원
	(항만터미널) 선박 입항료, 하역작업 및 부두이용료 등 발생 * 컨테이너 1TEU당 11만 8,000원 부가가치 창출	1억 1,800만원
	(항공터미널) 터미널 이용료, 항공기 적재작업 등 * 항공화물 1톤 유치시 98만원의 경제효과 발생	196억원
	(항공) 일평균 3만건 항공화물 국제 운송 (한국→미, 중, 동남아) * 항공운임: 1kg당 1,500원 부가가치 창출	300억원
GDC 1개 유치시 일자리 창출 300명 및 경제효과 약 1,000억원 발생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2018.04.30.),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국내 유치를 위한 'GDC 유치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07 디지털 산업 청년인적자원 개발 사업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글로벌 산업여건을 변화시키고 있어,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축소하고 채용을 취소 혹은 연기하여 청년층은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음
- 청년층이 취업을 선호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시장 여건이 개선되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인천시는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등 관련 분야 공공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취약

◆ 사업내용

-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보조를 맞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획득 및 활용 등 기초단계의 과정과 스마트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숙련기술자 양성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중장기적으로 지능정보기술 교육을 통한 숙련 디지털 활용 기술자 양성기관을 인천에 설립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디지털 인력개발 분야 허브 역할 담당
 - 현재 개발 계획 중인 계양테크노밸리에 지능정보기술 숙련인력개발 기관 설립을 제안·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앵커 역할 기대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일자리정책과,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기대효과

- 청년층에 디지털 기술활용과 산업분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
- 인천시의 첨단분야 직업교육 인프라 조성

08

인천형 그린뉴딜 플랫폼 구축 : 기후스마트시티 조성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산업물류 중심의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GCF 등 기후녹색분야의 국제기구들이 입지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잠재역량을 조화시키는 데는 다소 미흡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을 2만 24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한국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최근 코로나 이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린뉴딜¹⁾에 인천광역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할 상황
- 재생에너지 투자나 기후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사업추진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 그린뉴딜의 관건은 인프라 구축과 연결이며, 차세대를 위한 협치에 기반
 - 그린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 구축되고 확대되어, 모든 지역이 연결되어야 함
 - 제러미 리프킨 : “녹색인프라 전환의 성공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 연속성’과 모든 세대와 집단의 ‘연대’가 중요
- 201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기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6대 요소에 맞춰 완화와 적응, 투명성, 기술, 자원, 역량 강화에 대한 기후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는데, 최근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크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정리한 청와대의 발표와도 부합함

◆ 사업내용

-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위치기반의 에너지-온실가스-미세먼지 정책수립 및 추진기반 구축
 -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도입, 에너지-온실가스-미세먼지 분야 확대 적용
- 기후환경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와 실증연구 및 거버넌스 구축
-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다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녹색진단, 순제로 배출을 위한 녹색전환 유도, 자발적 협약 확대

1)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정책이 대공황 타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였다면, 21세기 그린-뉴딜은 기존 뉴딜에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배와 형평성 부분이 강조되는 개념

- 에너지-그리드, 상징적 녹색건축물 설계 및 건축, 교통인프라 업그레이드, 그린-뉴딜에 대비한 직업훈련 확대 등
-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한 이해당사자 교육서비스 확대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의 상호연동 수립 및 로드맵 구축
- 에너지 소비공간인 도심 건물과 도시구조물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청정재생에너지 발전기반’ 구축 및 확대
 - 환경 훼손과 주민생업과의 갈등유발 가능성이 큰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 건설 지양
 - 시민참여형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학교 및 공공건축물의 Active House 기술²⁾ 도입 지원 등
 - 고효율 투과성 솔라필름 및 BIPV³⁾ 기술 등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 검토, 성과검증을 위한 리빙랩 지정 및 테스트베드 기능 연계
-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한 상수도 노후 관거교체 조기 완료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녹색기후과) *사업기획(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 소요예산 : 약 50억원/년 (상수도특별회계 및 민간부담 재원을 제외한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그린뉴딜은 대전환을 의미하며, 그 계기는 '기후위기'인데, 지구 온도 1.5℃ 돌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구위기임을 선언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와의 연관성을 가지며, 인천만의 정책지향에 따른 시너지와 상징성 확보 가능
- 건물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을 포함한 기후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대 가능
- 제로 에너지 하우스 정책의 ‘Passive House’ 및 ‘Active House’ 통합형 도약기반 가능

2) 제로 에너지 하우스 :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 고 단열·고기밀 등 건축적 기술인 Passive 기술을 통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 설비·신재생에너지 등 설비적 기술인 Active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체 충당율을 극대화

3)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09

지역 주력제조업 리쇼어링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산업은 업종별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여, 산학연 협업수준이 낮고, 혁신역량이 매우 취약함. 예를 들어, 바이오의약 부문은 대기업 위주로 입지해있는 반면, 소재부품산업과 로봇산업 등의 중견 이상 기업 수는 매우 열악
-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는 중간재 조달을 위한 '제조업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
 - 저임금·저비용으로 최적화된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신흥국의 위험관리역량 부족으로 언젠든 조달공급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
- 인천의 주력산업인 로봇 및 전기차 배터리, 소재부품산업 부문의 중견규모 이상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직적 협업을 강화할 필요

◆ 사업내용

- 정부 지원사업(이전비용 지원, 세제혜택 등)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책 발굴
-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파격적인 저가로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로 리턴하는 전기자동차(전지), 로봇, 소재부품 등 중견규모 이상 기업을 적극 유치
- 리쇼어링 지원에서 수도권 규제 제도 개선 추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수도권 배제 원칙을 완화하여 “지역 내에 주력산업이면서 앵커기업이 先입지하여 관련 공급업체의 제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도권의 이전 지원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투자유치과)

◆ 기대효과

- 기업유치로 인한 자체 생산 공급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중견규모 이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중소협력사의 패키지 귀환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수직적 협업체계 강화 및 혁신역량 확충

10

지역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기 착공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지역내 각종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거나 보류되어있는 상태
- 필수절차에 따라 지연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의사결정 유보로 인한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시행 필요
- 일부 경기침체로 인한 입지수요를 우려하고 있지만, 단지 조성에 2~3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님.

◆ 사업내용

- 남동구의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로 GB해제와 중투위 심의를 앞두고 있음. 인천시가 GB해제를 서둘러준다면, 내년 착공도 가능할 것임
- 송도의 바이오헬스융합단지도 주관기관만 결정되면, 빠른 시일내 착공 가능
- 검단2산단은 국토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투자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 원활한 협의 가능성이 큼
- 남동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인천시 GB물량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만큼 조속한 시행 필요
- 상기 산단 가운데 2021년내 착수가 가능한 1~2곳 정도 우선 시행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산업진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남동구청, 서구청)

◆ 기대효과

-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건설부문 취업유발
- 바이오 소재 강소기업, 로봇 앵커기업 등 외부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유발, 생산유발
- 기업집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11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의 소재부품산업은 기업체수 기준 7.4%로 집적수준은 높지만, 부가가치 생산성이 열악하고, 산학연 협업수준이 낮아, 혁신역량은 매우 취약함
- 인천에는 395개의 소재부품전문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나, 이들 평균 매출액도 전국 평균에 비해 취약하여, 지역 소재부품산업의 영세성을 짐작할 수 있음
-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내 자립화'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수준의 대책은 미흡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 대응적 정책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지역 소재부품산업은 기계금속, 자동차 업종의 비중이 높지만, 바이오의약은 중소기업 기반이 매우 취약
- 지역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소재부품 국산화라는 측면에서는 대중소 협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정책수요가 가장 많음
- 인천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산하의 한국희소금속산업센터, 한러혁신센터가 입지해있으나,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국책 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는 자체적인 R&D 프로그램 발굴, 연구개발 파트너 역할 확대 등 한국생산기술 연구소에 대한 지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국책연구소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유치 확대 및 지역 독자적인 소재부품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책연구소와 파트너십 및 지역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지역 연구개발 파트너 조직 육성
- 대중소 협력사업 및 리쇼어링 기업 기술개발 R&D 사업 우선지원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 소요예산 : 약 20억원/년

◆ 기대효과

- 소재부품 국가연구개발 사업 유치 및 파급효과 확대
-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소재부품중소기업 역량 강화
- 대중소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업종별 수직적 협업체계 강화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성 지원으로 소재부품중견기업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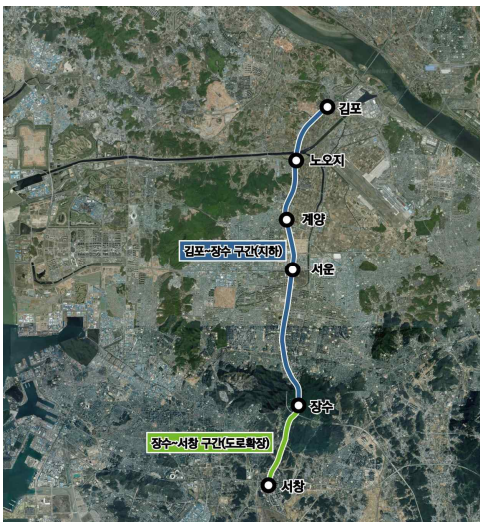
12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이후 개인간 교통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과 함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김포 구간의 만성적인 지·정체 해소를 위한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건설 필요
- 특히, 2020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조기 민간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남북간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
- 2020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통해 추진시 2022년 이내 사업착공이 가능하여 고용창출 등 조기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사업내용

-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서창~장수간 연장 18.4km(왕복4차로~6차로)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
- 현재 2022년 착공, 2036년 준공 예정으로 장승백이, 신장수, 삼산, 노오지, 신김포 등 5개소의 유·출입시설 및 1개소의 영업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44,200백만원 소요 예상
- 서창-김포 고속도로 노선도(안)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도로과)

◆ 소요예산 : 844,200백만원(민자)

구분	단기(2017~2021)	중기(2022~2026)	장기(2027~2036)	소계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	270,144	574,056 (3년간)	844,200

※산출근거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 기대효과

- 2022년부터 투입되는 민간재원을 행정절차 등의 완화를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하여 2022~2026년까지 연간투입되는 약 540억원/년을 2020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행정절차 완화 등을 통한 민간자본 조기 투입시 2020년 하반기 약 200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하며, 2021~2025년간 연간 500억원 투입과 함께 전체 공사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교통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영종도~신도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은 영종도~강화~개성으로 연결되는 대북연결도로의 일부이며,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조기 추진 가능
- 도서지역간 연륙화 도로건설을 통해 신도, 시도, 모도 지역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 신도~모도~장봉도의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또한, 추가적으로 신·시·모도~장봉도 연륙화 사업으로 확장시켜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응급시 신속대응 가능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간 연결도로 3.8km(교량 1개소 1.7km)사업으로 2020년 착공~2024년 개통 예정
-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으로, 1단계 영종~강화·교동도 18.04km, 2단계 강화~개성공단 47.5km, 3단계 강화~해주 16.7km, 총 사업비는 2조 4천322억원임
- 영종~강화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0년 5월 기공식을 열었으나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함. 이에 인천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6년) 변경을 요청해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요청
-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구간 중 영종~신도 3.5km 는 2019년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되어 2025년까지 국·시비 1,250억원 투입 가능
- 이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신·시·모도~장봉도간 연결도로 약 1.9km를 확장·추진하여 장봉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비 약 900억원 투입 가능
- 영종도~신도 연결도로(기존)와 모도~장봉도 연결도로(신규)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도로과)

● 소요예산 : 124,879백만원

- 공사비 107,580백만원, 보상비 7,009백만원, 시설부대경비 10,282백만원(‘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비 70% 지원)

(단위: 백 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소계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8,661	15,000	15,000	15,000	30,000	41,218	124,879
모도~장봉도 연결도로	-	-	-	-	-	-	90,000

※산출근거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평화도로 건설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장기적으로는 영종~신도~강화, 강화~고성을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또한, 신·시·모도~장봉도간 연결도로를 신규로 추진하여 도서지역내 접근성 향상과 관광활성화 유도 가능

14

인천 골든하버 조성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신국제여객부두 및 인천크루즈전용터미널 인근 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메카 도약
- 인천항 방문 국내외 관광객 대상 쇼핑·레저·친수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대시민 해양친수공간 확보
-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관광산업 특히, 크루즈 관광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나, 기투자된 기반시설의 유희화 방지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시기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마련 필요

* 2020년 4월 24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관광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담회의를 개최, 관광장관 선언 내용 중 미래준비(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디지털 기술 육성 및 관광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 가능한 전환 지원) 포함

◆ 사업내용

- (투자유치)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항만배후단지 내 복합관광단지 조성
 - * 통합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을 개장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미운영중
 - 2019년 말 상·하수도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 완료
 - 2020년 사업자 투자유치 확대
- (건설부양)신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터미널 및 골든하버 대중교통 연결 추진
 - 국제여객 증가에 대비하여, 개장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 터미널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 소요예산 : 민자

● 기대효과

- 코로나19 이후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는 카페리 및 크루즈여행객 수요 대비 기반 확충
- 국내외 여행객들 대상으로 인천지역에서 쇼핑 및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해양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골든하버
Golden Harbor

Golden Harbor에 투자하십시오!
Golden Harbor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카페리 및 크루즈여행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국제여행터미널을 건설하고 배후부지에는 바다와 도시가 공존하는 신개념의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프로젝트입니다. 인천항과 바로 연결된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에서 즐기는 Urban 라이프스타일 쇼핑!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휴식,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골든하버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 2030년 기준 카페리 및 크루즈 이용 방문객수 - 연간 약 300만명



15

제3연륙교 건설 조속추진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인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여객·화물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
- 경제자유구역 간(영종~청라) 상호연계 및 수도권 중·서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영종·청라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사업내용

- (건설부양) 서구 청라동-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66km(해상부 3.64km, 육상부 1.02km) 규모 연륙교 건설
 - 과업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 사업규모 : L=4.66km(해상교량 3.64km, 육상구간 1.02km), 왕복 6차로(자전거도로, 보도 설치)

□ 진행상황

- 영종·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에 의해 공사비는 기부담*되었으나,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인천대교)의 손실 예상으로 인한 국토교통부 반대로 공사 지연. 인천시가 손실을 부담기로 하면서 유료도로 개통으로 확정(17)

* 제3연륙교 건설비는 영종·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분양가에 반영해 입주자들이 부담

□ 쟁점사항

- 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신월IC~서인천IC 구간 지하화 사업의 남청라IC 연장으로, '제3연륙교'와 고속도로 연계사업을 반영한 제2차 고속도로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던 사업의 지연 가능성 증가⁴⁾
- 영종·청라 주민의 반대로 인천시는 검토를 중단했으나 국토부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 요구⁵⁾

4) 김갑봉(2020.03.25.), [단독] 국토부, 영종~청라 '제3연륙교' 고속도로화 검토 중',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82>

5) 김갑봉(2020.04.29.), '영종 제3연륙교 12월 착공 '국토부 비협조'로 난항',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69>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경제자유구역청·국토교통부)

◆ 소요예산 : 5,699억원

◆ 기대효과

-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확대
 - 내륙과의 최단거리로 시간 및 비용 절감 가능
- 영종·청라국제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 수도권 서부권역 균형 발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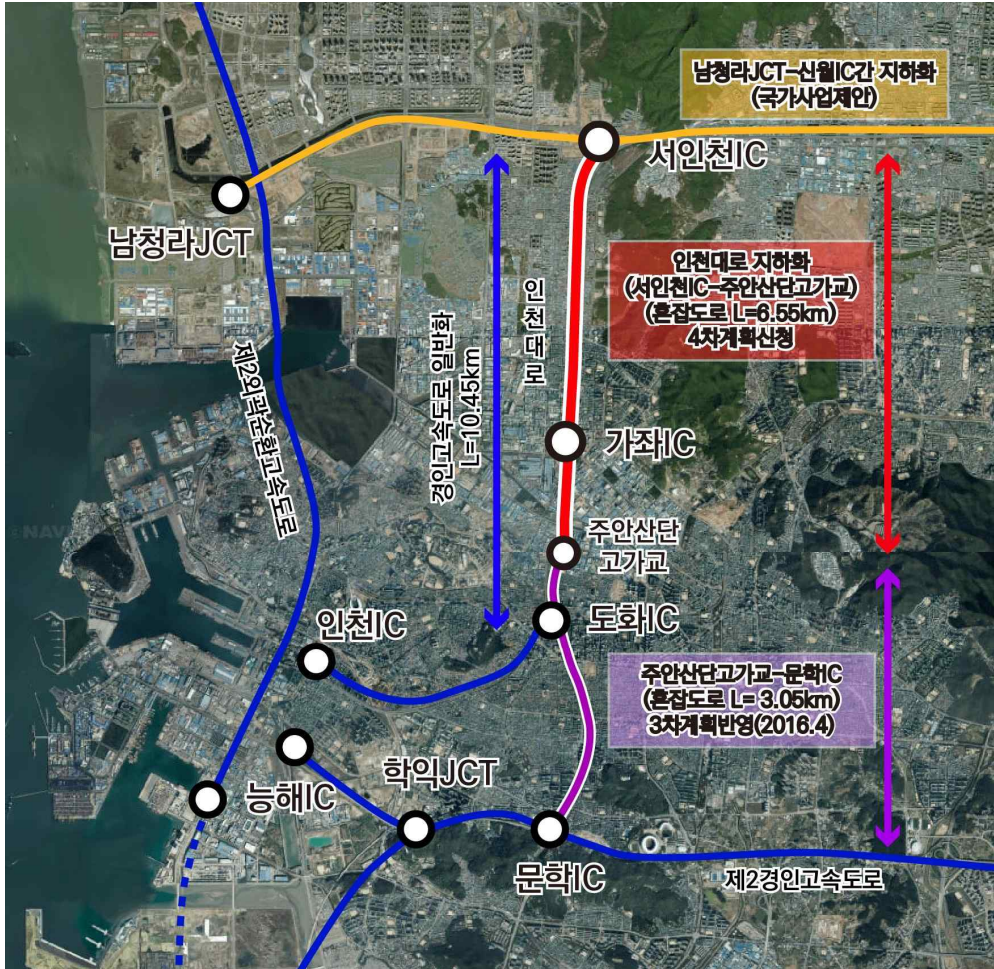
경인고속도로 및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2017년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지역간 단절 등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도로 사업과 함께 지하화 사업 추진
-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신월IC~서인천IC로 축소되면서 청라로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간 연결성 문제, 일반도로 변경에 따른 혼잡 증가 등 새로운 교통문제가 재생산됨
- 이에, 신월IC~남청라IC간 경인고속도로 확대 및 지하화, 서인천IC~문학IC간 지하화를 통한 혼잡해결 및 제2경인고속도로간 연결성 확보, 일반도로 지상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필요

◆ 사업내용

-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신월IC~인천요금소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여의도~신월IC간 지하화 도로 사업(2021년 2월 개통예정)과 연계하여 신월IC~남청라IC간 17.7km를 경인고속도로로 확대 지정하고 지하화하는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제2외곽순환 도로와 연결성 확보
 - 총 길이 17.7km 지하화 사업비 총 1조9,000억원, 사업기간 5년
- 일반도로 전환 구간인 서인천IC~인천기점의 경우 지상부는 공원화하여 인천시민에게 돌려주고, 혼잡통행해소를 위해 서인천IC~도화IC(공단고가교)간 지하화와 기존 혼잡도로로 지정된 도화IC~문학IC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성 확보
 - 총 길이 9.6km 구간 지하화 사업비 총 1조107억원, 사업기간 5년
 - 2016년 도화IC(공단고가교)~문학IC 구간은 제3차 혼잡도로 계획 대상사업 선정
 - 2019년 서인천IC~도화IC(공단고가교) 구간은 제4차 혼잡도로 계획 반영을 위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 추진
- 일반도로로 전환된 지상부는 생활형 도로 및 S-BRT 도입, 공원·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쇠퇴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유도
 - 2020년 S-BRT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노선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



● 추진주체

- 주관·전담(국토교통부, 인천시 고속도로재생과)

● 소요예산 : 2,910,700백만원

- 신월IC~남청라IC간 17.7km 지하화 사업은 총 공사비 1조9,000억원(국비), 사업기간 5년
- 서인천IC~도화C(공단고가교)~문학IC간 9.6km 지하화 사업은 총 공사비 1조107억원(국비, 시비), 사업기간 2021년~2026년(6년)

◆ 기대효과

- 신월IC~남청라IC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여 경인고속도로로 확대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조기 재정투입을 통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시켜 수도권 동서방향 교통난 해결
- 서인천IC~도화IC(공단고가교)는 제4차 혼잡도로 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면제 등 행정절차 완화를 통해 2021년 조기 재정투입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주변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시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
- 경인고속도로 확대 지정, 혼잡도로 지정 등 관련 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면제, 국비지원 등의 행정절차 완화로 조기 재정투입을 통하여 지역단절 도시문제 해소와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기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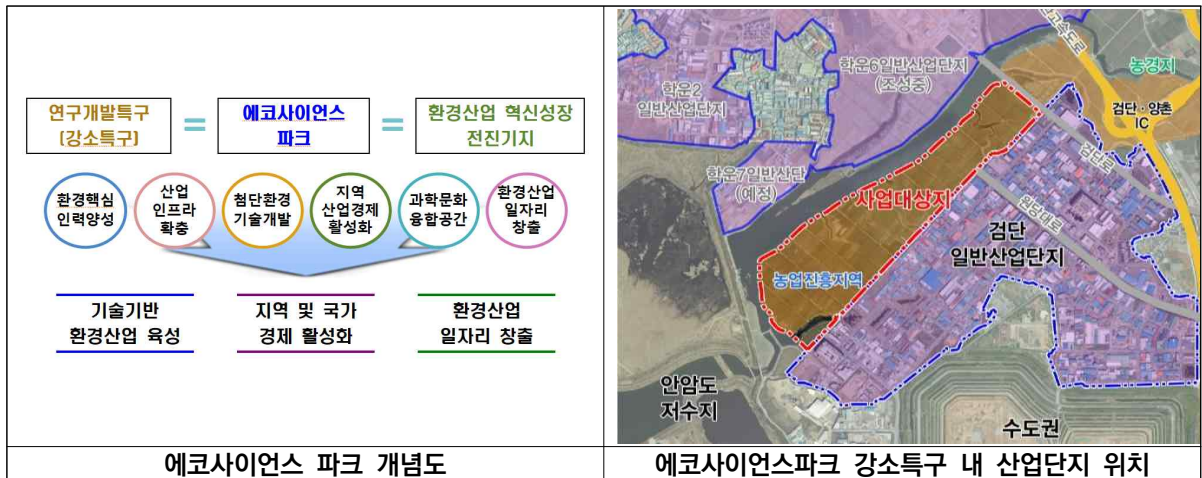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디지털 산업’ 분야의 육성과 더불어 ‘그린뉴딜’을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송도 녹색환경 금융도시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인천시 송도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위치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녹색금융 국제회의 및 유관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9년 12월에는 기후기술 개발 및 개도국 기술이전 역할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지역사무소를 송도에 유치하여 기후기술과 녹색금융의 글로벌 허브로서 인천시의 역할 증대가 기대
- 인천시의 강점인 글로벌 녹색금융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역량이 있는 기업체의 유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생산시설 및 국제교류 인프라 설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송도 GCF 콤플렉스 조기 조성 및 녹색·환경 분야의 앵커기업 유치, 녹색금융 및 MICE 기능 확충과 관련 인프라 강화
 - 정부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시 송도에 글로벌 녹색금융 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 앵커기업 및 연구시설, 녹색금융 관련 금융기관, MICE 시설 및 국제교류 인프라 등 확충
- 인천시와 환경부가 준비 중인 환경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에코사이언스파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 인프라 확보
 - 에코사이언스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검단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녹색·환경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녹색기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통상부)



◆ 기대효과

- GCF 중심의 글로벌 기후환경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녹색·환경분야 기업 및 기술력과 해외 기후변화 수요와의 연결을 통해 산업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책 환경 연구시설 주변의 환경산업 기반확충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2009년 인천시는 이공계 중심의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동북아시아 최고의 연구 및 교육 허브를 조성하고자, 당시 지식경제부와 함께 인천글로벌캠퍼스 기공식 개최
 - 2012년 1단계 조성사업을 마치고, 1개 대학 50명의 학생으로 최초 개교하여, 현재 5개 대학 3,100여명의 학생이 입주
-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교육 외에 산학연 연구개발 기능도 활동 개시
 - 2018년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허브 역할을 할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정부 및 인천시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마련되어 운영
 - 구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으로 유타대와 인하대가 함께 ‘유타-인하 약물전달시스템(DDS)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를 송도 BRC(Bio Research Complex)에 설립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당초 유치목표 달성이 다소 지연되면서, 각종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근 학생 수의 증가 추이, 해외대학의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면, 대학의 추가 유치를 위해서는 2단계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 당초 목표인 1단계 5개 대학의 학생 수 5천명에는 아직 학생 수에서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최초 개교 이후 각 대학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초 목표였던 5개 대학이 모두 입주하여, 추가적인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선 시설조성이 필요
 -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2단계 조성사업의 공사기간도 고려해야 함
- 인천글로벌캠퍼스의 2단계 확장 사업은 캠퍼스의 자생적 성장구조 확보와 종합대학으로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

◆ 사업내용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 5개 대학의 학생 5천명 추가 유치 목표

◆ 추진주체

- 주관·전담(산업통상자원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림] 인천글로벌캠퍼스 단계별 현황



● **소요예산** : 약 2,400억원(국비, 지방비, 민자)

● **기대효과**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으로 지역내 생산 및 고용유발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확충으로 5개 대학의 학생 5천명 추가 유치 및 1,2단계 합쳐 총 10개 대학의 학생 1만명으로 종합대학 수준의 최소규모와 다양성 확보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
 - 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실행하였고, 중앙 단위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사 간의 고용유지와 유연노동을 상호보장하는 협약 유도 필요
- 한시적인 사회적 협약기간 동안에 인천시가 노동자들에게 생계비 보조와 함께 강력한 직업능력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부양 및 산업역량 강화 효과를 동시에 실현

◆ 사업내용

-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노·사가 협약하며, 학계와 시민사회가 공증하는 “인천시 고용안정 사회협약” 체결
 - ① 사측은 고용 유지 및 사회보험 지원 보장, ② 노측은 임금동결 및 무급휴직 등으로 고통 분담, ③ 인천시는 고강도 직업교육훈련 및 일정액의 생계비 지원, ④ 사회협약 참여자들에 대한 고용 연속성 보장 원칙 준수
- 인천시와 산업계는 중임금·중숙련 수준의 대규모 고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천형 일자리” 창출
 - 전기자동차부품산업, 항공MRO산업, 영종지역 관광서비스산업 등
- 인천지역 각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훈련 참여자들에 대한 원직 복귀 보장 또는 인천형 일자리로의 이직 경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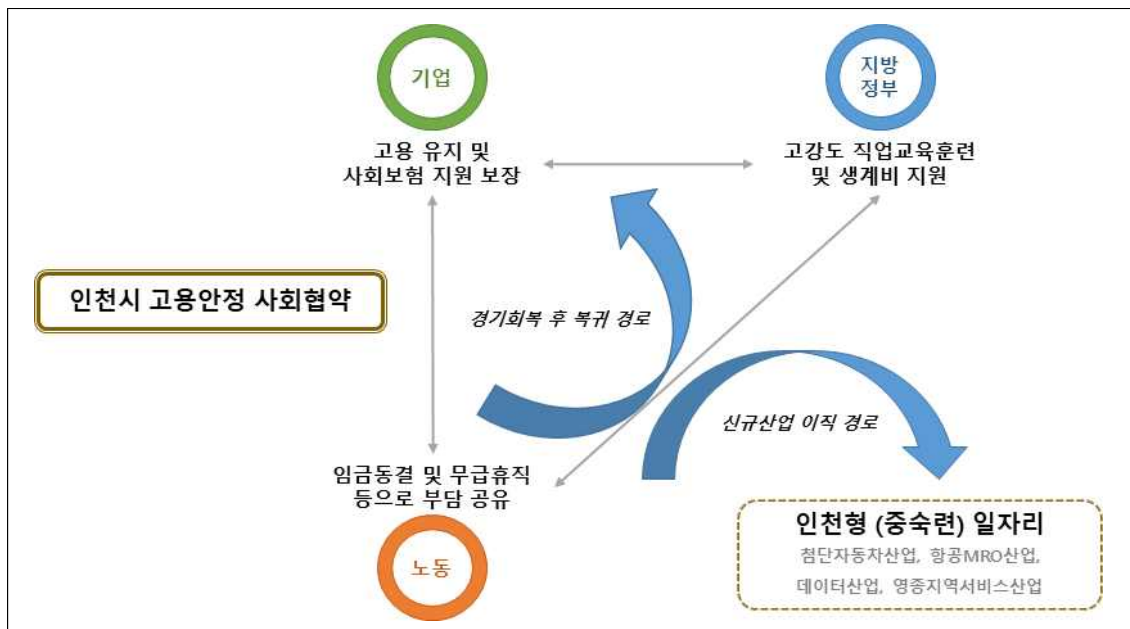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 기대효과

- 광역시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선도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고용위기 극복 사례 창출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량실업을 예방하고, 경기침체기 동안 경제주체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임
- 경기침체기 이후 신성장 유망산업의 성장에 수반되는 인력양성 수요에 대한 사전적 대응
- 재직자의 직업훈련 후 원직 복귀에 의한 기업역량 강화
- 인천지역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합 정비하고, 교육참가자 및 산업현장의 수요 맞춤형 체제로 전환

[그림] 인천시 고용안정 사회협약 및 인천형 일자리의 순환 구조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영세소상공인은 여전히 금융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
- 인천시의 1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조기 소진되어 추가적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필요
- 영세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조차도 진입장벽이 있는 만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의 해소도 중요함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 2차 및 3차 추경을 통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활용 재원을 확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영향이 큰 중구 지역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공급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 시행
 - 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규모 확대를 통한 무담보 대출 수용력 증대, ② 영세소상공인에 한정하여 인천시의 이차보전 비율 확대, ③ 관내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금리 협약 추진, ④ 지역 내에서 민간부문의 한시적 상호부조금융 운영 가능성 검토

◆ 추진주체

- 주관·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기대효과

- 국가의 방역 조치에 의한 경기침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망을 형성하여 경기침체기 동안 영세소상공인의 생존력 제고

21

업종별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 차등화 및 지속성 확대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이음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연계를 통하여 소비편의와 소상공 업종 지원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 업종에 대한 정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한정적인 재정으로 지원대책의 효능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수준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

◆ 사업내용

- 피해 수준에 따라 이음카드에 지원되는 캐시백 요율을 업종별로 차별화
 - 현재 이음카드는 업종 구분 없이 6월까지 10% 캐시백 지원
 - 재정여력, 결제예상액, 정책지원 필요도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캐시백 요율을 조정하여 7월부터 시행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 기대효과

- 피해도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화 구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소비확대를 통한 피해업종 소상공인 집중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4분기 동안 기간산업인 항공업·해운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2/4분기부터는 수출제조업으로 위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항공업·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지만, 위기에 더욱 취약하고 인천지역 기반이 강한 기간산업의 중소 협력업체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함
 - 금융위원회는 항공업과 해운업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 의지를 밝혔으나, 협력업체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음
-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같은 인천의 전통적인 주력 수출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앵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업체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 사업내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활용한 기간산업 대상 협력업체 생존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① 인천시는 항공업·해운업이 집중된 중구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② 항공업·해운업의 협력업체 및 관련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수속 수요조사 실시 ③ 기간산업 협력업체 대상 패키지형 생존지원 사업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주력 수출산업 협력업체 위기대응 체계 구축
 - ① 4월 수출 동향 및 5월 수출 전망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위기 상황인 주력수출업종 파악, ② 주력 수출산업의 앵커기업(한국GM, 두산인프라코어, LG 등)과 인천시 간의 정책협의채널 구축, ③ 인천시-산업계 협력을 통한 2~3차 협력업체 생존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추진주체

- 주관·전담(인천시)

◆ 기대효과

- 경기침체기 동안 인천의 기간산업 및 수출 주력산업 협력업체 산업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고, 경기회복 이후 재도약의 기회 창출
- 앵커기업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의 기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하고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어 취약계층 고용여건 악화
 - 코로나19는 도시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화재, 폭염, 감염병, 침수, 범죄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역 단위 예방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도시의 안전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 제공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기업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어, 청년들은 구직시장의 축소를 체감하고 있음
 - 구인시장의 축소로 인해 구직단념층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일을 체험하고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 청년층에게 단기기간의 단순 업무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교육-일경험-경력형성으로 이어지는 경력개발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내용

- 인천시 도시안전 지킴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모집하고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요인 파악,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전마을 공동체 교육 역할 담당
 - 인천안전 모니터링 사업 : 폭염 취약 구조물, 붕괴위험, 심야위험지역 등 취약지역 및 요인을 발굴하고 지역생활 안전지도 구축
 - 주민참여형 생활안전 서비스 사업 : 생활방재 활동, 보행안전 지원, 학교주변 안전 등 사업참가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 마을안전 커뮤니티 활동 : 주민들에게 주변 지역의 위험요소를 알리고 위기상황 시 대처방법과 주민 스스로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인천시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연계하여 기업체 및 공공영역의 업무를 경험하고 현장중심의 일터학습을 통해 직무능력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 민간기업연계형 사업 :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인천시 소재 청년들에게 기업탐방 및 일경험 기회 제공

- 공공서비스혁신형 사업 :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업무의 과정을 학습하고 청년의 눈으로 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일·체험과 교육을 병행
- 지역사회기여형 사업 :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연계하여 인천시 마을단위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청년들에게 사업구상 및 시범사업 실현 기회제공

◆ 기대효과

- 인천시 안전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향후 도시 안전향상에 기여하고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청년들에게 민간-공공-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일·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새로운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향후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함

24

생활 SOC 공급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중앙정부의 생활SOC 사업은 관련부서별 세부사업으로 144개 국고보조사업이 있지만, 가장 큰 흐름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충 방안'과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복합SOC사업'으로 구분됨
- 인천시는 2019~2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이 선정되어, 302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예정임

[표]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백만원)
중구	신포 지하공공보도 재생사업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625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900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2,297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012
부평구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532
계양구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148
	구립 다인어린이집 이전 신축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1,597
서구	청라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50
	오류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050
	원당 꿈키움터 조성사업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450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468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옹진군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10.4.),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추진한다!' 보도자료

- 코로나19 이후 인천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편익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복지, 건강에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더욱 절실해진 안전과 도시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인천시 생활SOC 현황

- 인천시 생활SOC 수준은 수도권 타시도와 비교할 때 대부분 시설에서 부족한 편이고 중앙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수준에 대해서도 목표치에 비해 매우 부족함
- 특히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수영장은 정부목표 치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도서관도 2/3 정도 수준으로 인천시의 문화여가시설은 매우 부족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체 수는 크게 부족하지 않으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정부 목표치 40%에 비해, 인천시는 유치원 20%, 어린이집 12%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어린이집, 민간유치원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필요
- 이외에 도서관, 노인교실, 기초의료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이 부족

[표] 생활SOC 타시도 및 국가기준과 수준 비교 종합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정부 목표	수요대비 공급량	수도권 비교* (서울·경기)	타광역시 비교* (부산·대구)	종합수준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전체		85.5%	△	▽	인구감소대비 적정
			국공립	40%	20.2%	△	△	정부 목표 대비 미흡
	학습	도서관	작은 도서관	7.6천 명/개소	11.5천명/개소	▽	▽	인구대비 부족
			전체		99.3%	▽	▲	인구감소대비 적정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	40%	11.8%	▽	-	정부 목표 대비 미흡
			경로당		235명/개소	*	-	적정
		마을노인 복지시설	노인교실		9,584명/개소	▼	*	노인인구 증가 비해 부족
	의료	기초 의료시설	의원		1,919명/개소	▽	▽	인구대비 다소 부족
			건강생활 지원센터	0.5개소	0.7개소	▲	△	정부 기준 상회
	체육	생활 체육시설	간이 운동장		0.8㎡/인	▽	△	전국 평균 대비 미흡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 도서관	4.3만 명/개소	5.9만명/개소	▽	△	인구대비 부족
	돌봄	사회 복지시설	사회 복지관		14.7만명/개소	▽	▽	인구대비 부족
			노인 복지관		12.8만명/개소	▽	▽	인구대비 부족
	의료	보건소		군구 당 1개소	100%	*	*	지역별 군구 개수에 따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9.1만명/개소	▽	-	
	문화	공공 문화시설	문예회관, 전시시설	3.9만 명/개소	7.0만명/개소	▽	-	정부 목표 대비 미흡
	체육	생활 체육시설	공공 수영장	8.5만 명/대소	15만명/개소	▽	▽	정부 목표 대비 미흡

낮음(▼), 다소 낮음(▽), 비슷한 수준(-), 다소 높음(△), 높음(▲), 경향성 없음()

자료 : 안내영(2019)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초 연구, 인천연구원

□ 인천시 지역별 필요한 생활SOC

- 어린이집은 대체로 수급이 양호한 편이나, 연수구가 인구대비 부족한 편이고, 동단위로는 주안동, 부평동, 구월동 등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집중 공급 지역에서 부족
- 유치원은 도서지역이 부족한 상황이며, 내륙지역은 서구, 연수구, 중구 등의 원도심 지역이 부족

- 노인시설 중 경로당은 500세대당 1개 기준으로 건설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안4동, 금창동, 부평5동, 주안2동, 부평4동, 울목동, 문학동, 송의4동, 송림1동, 주안6동, 부평2동, 간석2동, 연안동 등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된 저층노후 주거지역이 부족
- 노인시설 중 노인교실은 노령화에 따른 평생교육과 학습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천 전 지역에서 확충 필요
- 공공도서관은 4.3만명/개소 기준으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 부족하며, 2019년 중구(신포동), 서구(오류왕길동), 강화군(선원면) 등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됨
- 작은 도서관은 7.6천명/개소 기준으로 동구와 강화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족하며, 특히 가정2동, 계양1동, 남촌도림동, 산곡1동, 용현5동, 논현2동, 청라3동, 오류왕길동, 장수서창동, 북성동, 만수2동, 만수4동, 불로대곡동, 송도3동 등의 지역(2019년 남동구(서창동), 계양구(계양2동), 강화군(강화읍) 등이 선정됨)이 부족
- 공공수영장은 정부기준 8.5만명/개소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이 매우 부족함
- 문화시설 중 전시관은 3.9만명/개소이지만 인천은 9만명/개소로 중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부족함
- 문화시설 중 문예회관은 구별 1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구와 동구는 문예회관이 없는 상태임
- 문화시설은 생활문화센터형태로 건설되어 공연, 전시공간 확충이 필요함

[표] 인천시 지역별 필요한 생활SOC

생활SOC	필요 지역
어린이집	연수구, 주안동, 부평동, 구월동
유치원	도시지역, 서구, 연수구, 중구
노인시설(경로당)	주안4동, 금창동, 부평5동, 주안2동, 부평4동, 울목동, 문학동, 송의4동, 송림1동, 주안6동, 부평2동, 간석2동, 연안동
공공도서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작은도서관	가정2동, 계양1동, 남촌도림동, 산곡1동, 용현5동, 논현2동, 청라3동, 오류왕길동, 장수서창동, 북성동, 만수2동, 만수4동, 불로대곡동, 송도3동
공공수영장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문화시설(전시관)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문화시설(문예회관)	중구, 동구

◆ 공급방향

□ 인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2020년 사업 추진

- 2017~2019년 동안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생활 SOC 사업 관련 내용은 28건으로 2017년 8건, 2018년 8건, 2019년 12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 특히, 28개 사업의 2020년 집행계획으로 책정된 사업비는 총 374.03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이들 사업의 조기 추진 유도를 통해 2020년 하반기에 374.03억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생활SOC의 확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실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촉진
- 인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2017~2019) 공동이용시설 사업비 및 2020년 집행계획

지정 년도	사업명	주소	시설명	총 사업비 (억원)	2020년 집행계획 (억원)
2017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동구 송림동 58-1 일원	상생예술촌	20.0	6.7
			꿈드림센터	86.7	44.9
			아뜨렛길 지하광장	10.2	9.1
	만수무강 만부마을	남동구 만수동 일원	국공립어린이집	8.0	2.0
			사랑방	10.0	0.5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부평구 부평동 65-17 일원	혁신센터(+행복주택)	692.5	100.18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서구 석남동 199-34 일원	복합커뮤니티센터	82.0	없음	
		마을공방	22.2	3.0	
2018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서구 가정1동, 석남 1·2·3동	석남어울림센터	248.8	31.5
			석남거북이기지	184.0	21.0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중구 신흥동 38-9번지 일원	세대공감 지원센터	26.1	부지매입
			지역어울림 거점공간	28.8	부지매입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계양구 효성동 169-12번지 일원	도시재생어울림복합 센터	93.8	28.6
			마을사랑방	10.5	1.1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일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70.0	28.4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73-5번지 일원	문화센터, 작은영화관, 사랑방	46.6	31.75	
2019	청년과 어르신인 OPEN SPACE, 비룡공감2080	미추홀구 용현동 568-83 일원	어울림센터	92.7	21.4(토지확보)
			생활SOC복합시설	29.5	5.5(토지확보)
			복지센터	14.57	1.1(철거)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연수구 청학동 3-90 일원	마을회관	9.3	0.2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27.2	7.9
	평화의 섬 연평 치유프로젝트	옹진군 연평면 325-160 일원	산업시설 문화재생	62.4	7.0
			커뮤니티 복합센터	49.6	미정
	수봉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우리동네살리기)	미추홀구 도화동 537-51 일원	경로당리모델링	3.7	미정
			복합커뮤니티 센터	25.0	6.0
			공립어린이집	27.0	11.0
수봉오아시스소담터			3.0	없음	
합 계			28개	2,006.17	374.03

□ 인천시 빈집정비사업 연계 추진

- 2019년 기준 빈집실태조사 결과, 인천시 빈집은 총 3,976호이며, 이 중에서 철거유도 및 직권철거가 가능한 4등급이 599호로, 이와 연계한 주차장, 공원 등 생활SOC 용도로 활용이 가능함

- 철거 가능한 4등급 빈집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등에 집중되어 있어 원도심지역과 도서지역내 생활SOC 공급이 가능
- 철거 가능한 빈집의 매입을 통해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 공급 유도
- 인천시 빈집 현황(2019년)

(단위 : 호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중구	350 (29.1)	209 (15.3)	54 (6.7)	59 (9.8)	672 (16.9)
동구	116 (9.6)	223 (16.3)	113 (14)	117 (19.5)	569 (14.3)
미추홀구	126 (10.5)	394 (28.8)	245 (30.3)	92 (15.4)	857 (21.6)
연수구	19 (1.6)	11 (0.8)	1 (0.1)	2 (0.3)	33 (0.8)
남동구	173 (14.4)	56 (4.1)	12 (1.5)	22 (3.7)	263 (6.6)
부평구	109 (9.1)	121 (8.9)	285 (35.3)	146 (24.4)	661 (16.6)
계양구	75 (6.2)	85 (6.2)	30 (3.7)	25 (4.2)	215 (5.4)
서구	185 (15.4)	214 (15.7)	6 (0.7)	21 (3.5)	426 (10.7)
강화군	18 (1.5)	26 (1.9)	37 (4.6)	41 (6.8)	122 (3.1)
옹진군	32 (2.7)	27 (2)	25 (3.1)	74 (12.4)	158 (4)
합 계	1,203 (100)	1,366 (100)	808 (100)	599 (100)	3,976 (100)

□ 생활SOC 공급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 장기적으로는 생활SOC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 유도
- 현재 생활SOC 사업은 구가 계획하고 중앙정부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시는 행정절차만을 관리하는 형태이지만, 인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속에 생활SOC 공급 유도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주차장, 공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공공개방공간 확충과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한 지역내 돌봄, 의료 등 서비스 지원 유도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미 수립된 계획은 빠르게 실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단기적 접근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기대

- 생활SOC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편익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복지, 건강에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더욱 절실해진 안전과 도시회복력 강화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의료, 건강 관련 시설과 함께 지역내 돌봄서비스, 안전서비스 등이 통합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안전 대응이 가능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 현상 초래
- 최근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유비저, 지카바이러스 등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감염병의 해외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경우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 공중보건의 주요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국제공항을 통한 신종감염병의 해외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관문인 영종도에 재난전문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하여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영종도 재난전문국립종합병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외 감염병 관리 기능을 분담하고, 신종병원체 정보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 감염병 진료 및 연구기관으로 역할
-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재난전문국립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제적 감염병 검역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송도 바이오의약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건안전도시로서 인천광역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

◆ 사업내용

- 해외 감염병 조기 대응을 위한 영종도 재난전문국립종합병원 조기 건립 추진
- 해외 입국 감염자, 인천권역 확진자 검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및 관리 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재난전문국립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검역 및 방역체계 구축

◆ 추진주체

- 권역별 감염병 및 재난 전문병원 구축사업 : 질병관리본부
- 주관·전담(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기대효과

- 인천광역시 감염병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영종도 공공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 항공사고를 포함한 각종 대형재난,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규모 인력 고용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바이오의약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감염병 진단기술, 치료제, 필수약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기회 제공
- 안전망 확충으로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이용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